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 4년 만에 ‘유죄’

정역 6개월 등 확정…도급사업장 사업주 책임 첫 판례
유가족들 “처벌 수준 낮아…기업 안전의식 개선 한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마용주 대법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사(한솔·다원이앤씨·백솔) 임직원과 감리사 등 8명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에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씨(51)에게는 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

년, 하청사(이면계약)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54)에게는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이, 현산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현산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된 HDC현대산업개발의 벌금형도 동일했다.

2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 한솔기업과 백솔건설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면서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최초의 판례가 됐다.

그러나 광주 학동 붕괴참사 유가족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 ‘생명을 앗아간 참사, 가벼운 처벌’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중대 재난에 대한 처벌 수위는 참사의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면서 “미온적 처벌로는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우며, 기업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개발·건설 현장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안전이 생명보다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 사회, 기업이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역사정의 원칙 제외…李대통령 경축사 유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성명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복 80주년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에 유감을 표했다.

17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역사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만 강조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올해는 일제에 국권을 되찾은 지 80년이자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첫 공식 대외 메시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면서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광복 8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역사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앞선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역사정의를 회복하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할 시기인 만큼 더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은 피해자들의 투쟁으로 정취한 역사적 성과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다”며 “피해자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존재 확인’이 아니라, 80년간 지연된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과거를 직시하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구체적으로 응답할 때만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단체는 “오는 2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사죄·배상이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당당히 대일 외교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청명清明 : K-풍류 나주의 전설 15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창작 무용극 ‘청명清明: K-풍류 나주의 전설’ 공연에서 동신대학교 비산무용단 단원들이 나주 영산포를 배경으로 한 사람 이야기 ‘아비사’와 ‘아랑사’ 전설을 표현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특검, 오늘 김건희·김예성 동시 소환…‘집사 게이트’ 수사

오전 10시 출석 예정…대질 신문 가능성도

김건희 여사와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 사팀에 동시 출석하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예성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원

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 (566억원)보다 부채 (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당시 각종 경영상 현안 또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 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일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김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차명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총 33억8000만원을 빼돌렸다는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지난 14일 김 여사를 구속 후 처음 소환해 공판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이 2시간 9분에 그쳤다.

당일 김 여사와 김씨가 같은 시간 나란히 출석해 조사받게 되면서 집사 게이트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선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며 IMS모빌리티 투자금이나 자신의 투자 수익 등에 김 여사가 참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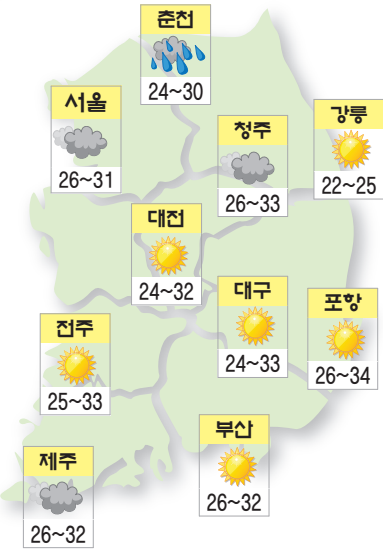
연합뉴스

SOCIETY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5:54 달출 00:08
예전 19:18 달진 15:41



광주	☀️	24~33
목포	☀️	25~32
여수	☀️	25~31
순천	☀️	24~33
구례	☀️	23~34
광주	☀️	23~33
해남	☀️	23~33
임도	☀️	23~33
흑산도	☀️	25~32
고흥	☀️	23~33
진도	☀️	23~32

목포	밀물 (고)	08:45 / 22:07
	썰물 (저)	02:05 / 14:07
여수	밀물 (고)	03:41 / 17:36
	썰물 (저)	10:12 / --:--

주민설명서 공무원 ‘박치기’

만년필 ○○광주 쓰레기 소각장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설명회에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주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여.

17일 광산경찰에 따르면 삼도동 주민 5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13일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광주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에 반대하며 담당 공무원의 얼굴을 박치기로 폭행한 혐의.

A씨는 입지 선정 절차 중 하나인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위해 현장을 찾은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파악.

폭행을 당한 피해 공무원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현장에서 인지하고 A씨를 입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 임정호 기자 jh4415@

안전보습 몬스타수분

TONYMOLY®
street culture

THE CHOK CHOK
GREEN TEA
Watery Cream

CONTAINS 100% PURE
GREEN TEA FERMENT EXTRACT
Instead of distilled water

TONYMOLY

토니모리 더촉촉 그린티 수분크림

EWG Green 등급 원료 처방

순도 100% 발효녹차 사용